

## 청렴체감도 조사 안내

### 청렴체감도란?

국가철도공단 업무 접점자를 대상으로  
부패인식 및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조사

### 조사 주체

국가철도공단(자체) 및 국민권익위원회(종합청렴도 평가)

### 조사 시기

■ 국가철도공단 자체 조사 상반기 중 1회

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8월~11월

※ 자세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# 결과 활용

■ 국가철도공단 자체 조사 공단 부패방지 정책 반영

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반영

### 응답 시 유의사항

■ **측정기간** 최근 1년 이내 인식과 경험을 질문하므로  
**정해진 기간** 외 발생한 일로 응답하지 않도록 유의

■ **응답근거** 실제 겪은 일을 측정하므로  
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에 따른 응답 지양

■ **공익신고** 공단에 대한 **VOC, 공익신고** 등은  
**공식 채널**을 통하여 제보  
※ 다음 페이지 참고 →

## 공식 신고 채널

### 부패알리오



#### 신고방법

한국윤리인권연구원 홈페이지(부패알리오) 또는  
부패알리오 어플을 통해 접속하여 기관 검색 후 신고

#### 신고대상

직무 관련 금품·향응·수수행위, 부정한 이권개입·특혜  
제공, 부정청탁 및 갑의 횡포, 공금횡령 및 예산 낭비  
행위, 기타 업무상 부정·부패·비위행위

※ 외부 위탁 운영하며, IP 추적이 불가하여  
익명성이 보장됩니다.

### 국가철도공단 부조리 신고센터



#### 이용방법

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→ 고객센터  
→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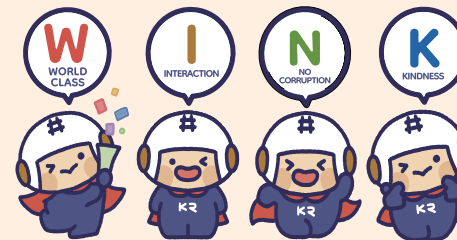
#### 세부유형

부패신고센터, 공익신고센터, 청탁금지법 상담  
및 신고센터, 갑질 Zero센터, 안심신고변호사

※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 
따라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.

우리는 청렴해! 다함께 WINK해!

## 국가철도공단 청렴·인권존중 실천을 위한 안내문



현장 끝단까지 동료의 마음까지 준공 이후까지

KR 국가철도공단

국가철도공단 기획본부 경영성과처 윤리경영부  
(☎042-607-3162~8)

##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은 협력사를 파트너로서 존중합니다

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 
누구에게든 존대합니다  
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 
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
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
서로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임을 기억합니다

## 갑질이란?

사회·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 
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 
행사하여 상대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

### ·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·

- **법령 등 위반** 법령, 규칙,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
- **사적이익 요구**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·유도하는지 여부,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
- **부당한 인사** 특정인의 채용·승진·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·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
- **비인격적 대우**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, 욕설·폭언·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
- **기관 이기주의**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
- **업무 불이익**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·근무시간 외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
- **부당한 민원응대**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,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
- **기타**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,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

##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

### 이해충돌 방지법이란?

공직자의 **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**를 금지함으로써  
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

### 누구에게 적용?

국가철도공단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 
(감리사 임직원, 각종 심의·평가위원 등)

\*공무상 심의·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

### 이해충돌 상황·행위란?

신고·제출 의무 상황	제한·금지 행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</li> <li>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·매수하는 상황</li> <li>■ 직무관련자와 금전, 부동산 등 사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한 상황</li> <li>■ 임용을 앞둔 고위공직자에게 민간 활동 경력이 있는 상황</li> <li>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을 하는 상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으로 사적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</li> <li>■ 고위공직자채용 담당자가 소속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</li> <li>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소속 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</li> <li>■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 사용·수익 하는 행위</li> <li>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얻는 행위</li> </ul>
 <b>사전예방</b>	 <b>사후적발</b>
 <b>이해충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·사후 신고</b>	 <b>제한·금지 행위 발생 시 제재</b>

##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습니다

### 청탁금지법이란?

부정청탁,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 
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

### 누구에게 적용?

국가철도공단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 
(감리사 임직원, 각종 심의·평가위원 등)

\*공무상 심의·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

###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은?

#### 금품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→ 모든 종류의 금품 등은 **금액에 상관없이** 수수 금지

#### 금품제공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

→ **1회 1백만 원, 회계연도 기준 3백만 원 초과** 금품 수수 금지

####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

- **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, 격려, 포상 목적으로** 제공하는 경우
- **원활한 직무수행·사고·의례 목적에 따라 일정 가액 범위 내**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등
- 채무의 이행 등 **정당한 권원에 의한** 금품 등
- **직무 관련 공식 행사**에서 참석자에게 **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** 제공하는 **교통, 숙박, 음식물 등**
- **불특정 다수인**에게 제공하는 **기념품, 홍보용품** 또는 **경연·추첨을 통한 상품**